「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」 입법 설명자료

❑ 필 요 성

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

○ **균형발전을 위한 추가적 정책적 지원**과 **방안**이 필요*한 상황

* 수도권 인구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50.3%('21.4)

○ 중부내륙지역은 인접 시·도가 많아 **지역간 연계·협력에 효과적이며, 발전에 따른 주변 확산이 가능한 지역**

②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서 중부내륙지역

○ 첨단산업(반도체, 바이오 등), 백두대간 및 아름다운 호수를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**국가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**으로 역할

○ 동해안 시대(70~80년대) → 서해안시대(90년대) → 중부내륙시대

③ 기여자의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, 공정한 경쟁 기회 부여

○ 충주댐·대청댐으로 **수도권 등 3천만명**에게 **식수와 공업용수 공급 등 공익 역할** 수행하지만, **불합리**한 **용수공급배분***과 **댐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****, **과도한 규제로 경제·사회적 피해******* 막대

* 충북도내 댐 용수 공급능력 중 충북도는 8.1% 불과

** 작은 지원금(출연금 대비 30%) 및 배분 절차 불합리(수공과 지자체 5:5)

*** 대청호 수변지역 약 10조원의 경제적 손실 등

○ **백두대간으로 인한 교통망 단절 등**으로 해당 지역 소외 및 **낙후가 심화**되는 결과* 초래

* B/C확보 어려움 → 교통망 등 각종 사업 추진 어려움 → 소외 심화

❑ 법안개요 (소관부처 : 행안부)

○ 법 령 명 :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

○ 발　　의 :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28명(2022.12.29.)

❑ 주요내용

○ **(국가 등의 책무)**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·개발과 보전을 위한 종합 시책 수립·추진,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노력

○ **(발전종합계획의 수립)**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 발전, 연계·협력 강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

○ **(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 등의 수립)** 환경부 장관은 합리적 규제 마련, 수자원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청취 및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 계획을 수립·시행

○ **(위원회 등의 설치)**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업무의 효율적 수행 및 심의·협의를 위해 기획단, 위원회, 심의회 등을 설치

○ **(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·운영)**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·운영을 통한 지역간 연계·협력 및 균형발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

○ **(인허가 의제, 규제 특례, 재정적 지원 등)** 사업의 신속·효율적 진행을 위한 각종 인허가 의제·규제 특례, 환경기초 시설 및 도로·철도 등 경제활동 기반 시설에 대한 국고의 원칙적 지원

❑ 추진현황

○ 국회 성명서 발표(국회의원・도의원 참여) : ’22. 08. 31.
○ 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 구성・운영 : ’22. 09. 30 ~
○ 특별법 관련 시민사회단체장 초청 간담회 : ’22. 10. 21.
○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: ’22. 11. 07.
○ 특별법 제정 추진 민관정 공동위원회 출범 : ’22. 11. 18.
○ 정우택 국회부의장 등 28명 특별법 공동발의 : ’22. 12. 29.

❑ 기대효과

① 균형발전의 거점 및 국가의 신성장 동력으로 역할

○ **(국가균형발전)**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하여 연계협력과 확산이 용이한 지리적 여건을 살려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

○ **(국가 신성장 동력)** 첨단 산업, 백두대간 및 아름다운 호수 등을 활용한 문화관광 산업 등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역할

② 중부내륙지역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마련

○ **(연계 철도망, 도로망 구축 등)** 백두 대간 관통 철도망* 조속한 추진·복선화·구간 연장, 백두대간 연계 도로망(영동~단양) 건설 등

* 중부내륙철도, 이천~충주~문경~김천

○ **(지속가능한 발전)** 대청호, 청남대 등의 자연 보전과 이용의 조화로운 사업* 추진 등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* 자연 조망이 용이한 청남대 타워, 이동을 도와주는 친환경 모노레일, 목조를 활용한 숙소 등

③ 국가 정책에 소외된 지역에 대한 합리적 보상 등

○ 댐 관리에 대한 지자체장의 의견 반영 등을 통해 용수 공급량,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합리적 개선하고,

○ 각종 교통망에서 소외, 정주여건 부족 등으로 쇠퇴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